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회계 · 적법세금 · 성공경영 정보 —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3/ 8/ 23 통권 1637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CEO 에세이 - 이해익원장

부동산부를 신설하라

법인세 공제 · 감면사항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복리후생목적으로 구입한 콘도회원권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
- 법인세 공제·감면사항
- 국세청, 끊임없는 변화·혁신으로 경제정책 적극 지원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 8.18.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장기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된 후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특례 적용 안됨 (p.11)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税計經營戰略

<기업증여상속과 일반증여상속의 비교>

개념구분	일반증여상속	기업증여상속
대상범위	일반 자산, 재산의 증여 · 상속 등	중소기업 경영자와 승계가족
자녀증여공제	증여액 - 직계존비속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	기업증여가액(600억원까지) - 10억원
적용세율	일반누진세율(10%-50%)	10% 단일세율(과표 60억 초과 20%)
100억원인 경우 증여세	$100억 \times 50\% - 4.6억 = 45.4억$ 원	$60억 \times 10\% + 30억 \times 20\% = 12$ 억원
자녀상속공제	총 상속재산 - 기초가족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 5억원	기업상속재산 - [600억(30년 이상), 400억(20년 이상) 또는 300억(10년 이상)]
적용세율	일반누진세율(10-50%)	좌동
700억원인 경우 상속세	$700억 - 10억 = 690억 \times 50\% - 4.6억 = 340.4억$	$700억 - 600억(30년 이상) - 10억 = 90억 \times 50\% - 4.6억 = 40.4억$
부모요건	해당안됨	국내 거주자, 최대주주(지분율 40% 이상) 1인, 대표이사 재직기간 50% 이상 등
상속인 요건	해당안됨	18세 이상, 2년 이상 기업종사,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등

(안세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제공)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전조세정보
02-829-7575

주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637호 / 주간 34호

2023. 8. 23. (수)

·발 행 인:이윤선
·제 작:(주)안건조세정보
·대표전화:(02) 829-7575
FAX:(02) 718-8565

목 차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 02) 829 - 7575
팩스 :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 051) 642 - 3988
팩스 :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 053) 654 - 9761
팩스 :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 010) 3409 - 2427
팩스 :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 010) 5255 - 6116

-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가업증여상속과 일반증여상속의 비교	표지
C E O 에 세 이	부동산부를 신설하라	2
세무·회계상담자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이자/배당소득 지급조서 제출시기 문의 - 문의 - 상장주식을 기부받을 경우 기부금영수증 상 기부가액 문의 - 비용공제	4 5
눈에맞는 절세미인	복리후생목적으로 구입한 콘도회원권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	6
매일 절세재무요점	- 금융투자소득세 공제 - 주민세 납부해야 하는 8월, 주민세란?	8 9
직장인 Survival	리더십 기술을 향상시키는 방법 ⑤	10
최신 판례예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자와 그가 속한 법인에 소속된 다른 외부전문가(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세무확인 배제대상 외부전문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법인-4128, 2022.12.08) - 민·관이 공동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에 참여한 민간기관이 관련협약에 따라 지급받는 보조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지급받는 보조금 전부가 되는 것임 (사전법규부가-1001, 2023.01.19)	11 12
세정뉴스와 해설	올해 서울 주민세 962억원 부과...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13
마케팅 Tax consulting	장기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된 후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특례 적용 안됨	12
세무정보	- 법인세 공제·감면사항 - 국세청, 끊임없는 변화·혁신으로 경제정책 적극 지원	14 25
회계정보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36
노무정보	- 8.18.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47
세무환율정보	부가가치세를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3

부동산부를 신설하라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외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경종(警鐘). 위기에 닥쳐 울리는 종소리다. 2011년, 월가의 탐욕과 부패에 대해 ‘99%’ 미국시민들의 분노가 터졌다. 반 월가시위라는 경종이 울렸다.“미국의 최고부자 1%가 미국전체 부(富)의 50%이상을 장악했다. 1%의 탐욕과 부패를 우리 99%가 더 이상 참지 않겠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방값걱정, 끼니걱정을 하지 않게 해 달라.”

월가의 금융회사들은 사실상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흉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천문학적 규모의 공적자금 덕분에 여전히 막대한 특혜를 누렸다. 또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CEO)들은 한해 급여로 일반 월급쟁이의 수백년치 연봉을 챙기고 있다. 반면에 주택담보 대출로 집을 산 서민들은 원리금 상환을 못해 거리로 나왔었고, 그래서 자본주의의 상징인 월가에서 자본주의의 규탄시위가 발생한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자본주의가 끝났다고 볼 수도 있었다. 미국의 부실 금융대기업이나 부실 제조대기업들이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정부로부터 거액의 공적자금 수혈을 받고 연명했기 때문이다. 1%가 먼저 게임의 룰을 어긴 것이다. 그래서 월스트리트 시위는 큰 의의를 남겼다.

원래 서양종은 내타식(內打式)이고 동양종은 외타식(外打式)이다. 서양종은 종신의 내부에 추를 배단 후 종 전체를 움직여 소리를 내게 한다. 노틀담 사원의 큰 종이나 대제사장의 예복에 부착되었던 금방울이 내타식이다.

동양종은 종신 외부에 당목(撞木)을 쳐서 소리를 낸다. 보신각종이나 에밀레종이 그렇다. 당목은 종을 치는 나무 기둥이다.

서양종과 동양종은 동·서양의 시스템 차이를 상징한다. 한 때 발전을 구가 하던 미국식 경영은 내부 견제시스템 중심이다. 이에 반해 밖에서 질타와 협박을 해야만 조금 움직이는 시늉을 하는 한국식 경영이 대조적이다. 그런데 반 월가시위는 내타식이 아니다. 탐욕과 부패로 내부가 썩어서 작동 못한지가 오래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밖에서 시위대가 등장했다. 시위대가 바로 당목인 것이다. 서양에서 외타식의 등장은

천지개벽을 의미한다.

서양의 대표적인 외타식 사회개혁은 프랑스 혁명이다. 18세기 말 루이 16세의 '1%' 기득권들은 사치와 향락을 즐겼다. 게다가 교활하고 부패했다. 이에 배고픈 시민들이 일어났다.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가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라고 물질 모르는 망언을 했다. 시민들의 분노에 불을 질렀다.

한국에도 그런 망언이 있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밥이 없으면 빵을 먹으면 되지”라고 망령을 부렸다. 결국 4·19 민주혁명이 터졌다. 한국인들은 부마항쟁으로 유신정권을 무너뜨리고 6·10 항쟁으로 직선제 대통령제를 획득했다. 젊은이들과 시민들이 시대를 만들어 낸 당목이었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8월 11일 (금)	8월 14일 (월)	8월 16일 (수)	8월 17일 (목)
미	달	러	(USD)	1317.30	1321.10	1331.30	1338.30
일	본	엔	(JPY)	909.77	911.70	914.26	914.80
영	국	파	운 드	(GBP)	1669.22	1676.48	1690.75
캐	나	다	달 러	(CAD)	979.66	982.92	986.51
홍	콩	달	러	(HKD)	168.46	168.98	170.16
중	국	원	(CNH)	182.32	182.59	183.28	182.83
유	로	화	(EUR)	1446.72	1445.68	1451.52	1455.87
호	주	달	러	(AUD)	858.29	858.32	859.42
싱	가	폴	달 러	(SGD)	976.25	976.42	980.01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288.12	288.01	287.18

이자/매당소득 지급조서 제출시기 문의

- Q** 비영업대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매월 지급하고있습니다.
2022년 12월 발생분 이자를, 2022.12.31일자로 미지급이자로 회계처리후
2023년도 1월에 지급합니다.
2022년12월분 이자를 2023.1월에 지급하는 경우
2022귀속으로 보아 2022귀속 지급명세서에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하는지
실제 지급일 기준으로 2023년도귀속 지급명세서 제출대상해 포함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A** 2022년 귀속 비영업대금의 이자를 2023년 1월에 지급하더라도 2022년귀속 지급명세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의

- Q** 저희가 올해 1월에 해외로 수출한 물품 대금(외상매출금)이 달러로 입금이 되었는데요,
해외 업체에서 1월 수출 물품 대금을 지급할 때 작년 8월경 수출했던 물품의 불량 대금(미지급
금)을 차감하고 송금하였습니다.
원래 저희가 불량대금은 따로 송금하는데, 이번 경우는 해외에서 인품없이 차감해서 송금했더라
구요.
차감된 불량대금이 이번 물품대금과 상관없는 건인데, 이게 외환거래법 상 문제가 되나요?
저희는 외상매출금, 미지급금 다 잡아놨기 때문에(해당하는 인보이스 서류 다 있음) 저희 내부적
으로 상계처리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관련 없는 대금을 상계처리 할 시 외환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하여 문의 드립니다.
꼭 해당 수출물품에 대한 불량대금이여야만 외환거래법 상 상계처리가 가능한건가요?
- A** 외국환거래법상 동일 거래에 대한 상계가 아닌 귀사의 경우처럼 다른 거래의 채권 채무에 대해서도 상
계가 인정되며, 그 지급 및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사의 질의내용은 세법내용이 아니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은행에 문의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
니다.

상장주식을 기부받을 경우 기부금영수증 상 기부가액 문의

Q 본 원은 기부금 단체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수령 중에 있습니다.
한 개인이 법정기부금 목적으로 지분율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인이 과거 취득한 상장주식을 본원에 기부하고자 하는데, 이때 기부자에게 발급할 기부금영수증에 기부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기부자가 취득당시 한주에 5만원으로 취득하였으나, 기부시점의 시세가 한주당 2만5천원 일 경우, 기부자가 취득할 당시의 금액인 5만원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할 지 아니면 기부당시의 시가인 2만5천원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공익법인 등이 상장주식을 기부받은 경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2항제5의3호 규정에 따라 기부한 자의 기부당시 장부가액으로 하면 됩니다.

♣ 법인, 법인세과-522, 2011.07.28

공익법인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해당하는 지정기부금단체가 상장주식을 기부받은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5의3호 내지 제6호에 따른 가액으로 하되, 기부금영수증상 기부금액은 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비용공제

Q 국외에 체류중인 비상장 법인(부동산/임대업)의 대표이사(1인주주 이면서 급여소득 신고)가 국내에 납세관리인이 없는 관계로 임차인 변경으로인한 임대차 계약시 국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면서 발생하는 왕복 항공료등을 위 부동산 임대업의 비용으로 처리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A 국외 체류자가 국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위해 발생하는 항공료는 임대사업과의 직접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복리후생목적으로 구입한 콘도회원권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

상담실 백종훈 차장

과세사업을 하는 회사가 임직원의 복리후생목적으로 콘도회원권을 구입하는 경우, 그 구입과 유지에 관련된 부가가치세액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될까?

부가가치세법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만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접대를 위한 목적이 아닌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목적으로 콘도회원권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종업원 복리후생목적 콘도회원권은 업무용 자산으로 봄

콘도미니엄이란 원래 1950년대 이탈리아의 중소기업들이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공동으로 휴양용 별장을 건설, 운영해 온 것이 그 시초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대로라면 법인의 콘도이용권구입은 종업원 복리후생목적이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오늘날 콘도의 의미는 호텔과 별장의 장점을 갖춘 관광숙박시설로, 특히 접대문화가 발달된 우리나라 입장에서 콘도회원권을 접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경우도 많기에 언뜻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받기가 어렵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회사가 콘도회원권을 구입한 경우 실제의 사용 사실 등을 파악하여 종업원의 복리후생목적으로 콘도를 구입·사용한 경우라면 업무에 관련된 자산으로 보도록 통지하고 있다.

또한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4호에서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면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를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49조제3항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하고 있다.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 또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 아닌 회사 임직원은 제외)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 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지출로 보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다른 사

람에는 주주(소액주주제외) 아닌 회사의 임직원은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의 임직원을 위한 복리후생차원의 콘도회원권이라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과세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진지하게 임직원의 복리후생목적으로 콘도회원권을 구입하였다면 그 구입관련지출비용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또한 이후 이용비용 및 연회비 등 해당액에 대한 매입부가세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물론 회사가 과연 진실로 복리후생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느냐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다.

♣ 법인46012-3030, 1997. 11. 26

콘도미니엄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법인세법상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보는 것이나, 콘도미니엄을 종업원의 복리후생목적으로 법인이 취득 또는 사용하였을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에 규정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종업원의 복리후생목적으로 취득 또는 사용되는지의 여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22601-1411, 1986. 04. 30

종업원의 복리후생용으로 취득 또는 임차하여 당해 목적에 사용하는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취득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제비용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종업원의 복리후생용으로의 사용여부는 실지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부가1265.1-3285, 1981. 12. 16)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것이므로,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한국 콘도미니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종업원 복리후생목적 콘도회원권은 업무용 자산으로 봄

복리후생 목적으로 콘도미니엄을 취득한 경우의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지만, 해당 콘도미니엄을 특정 임원들에 대해서만 사용하게 한다거나 또는 접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있는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부가1265.2-275, 1982. 1. 29

개인사업자가 손님을 접대하기 위하여 콘도미니엄을 매입한 것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월

— 금융투자소득세 공제

최대 5000만원 공제 대상	최대 250만원 공제 대상
국내주식 매매차익	해외주식 매매차익
국내주식형펀드 매매차익	국내채권 매매차익
국내주식형 ETF 매매차익	해외주식형펀드 매매차익
K-OTC 중소·중견기업	해외주식형 ETF 매매차익

화

— 주요 OECD국가 실질 상속세율과 공제제도

※ 단위 : %, 최고 기준, () 안은 명목 최고세율

일본 11(55)

비상장기업 80% 납세 유예, 5년 후 면제

한국 60(50)

가업승계시 일정 조건하에서 제한적 공제, 최대주주 할증 60%

프랑스 11.25(45)

환매금지 조건부 지분 75% 공제

미국 40(40)

부부간 상속세 없고, 자녀에게 부부 각 1170만달러까지 증여세 면제

영국 20(40)

상장주식 50%, 비상장주식 100% 공제



주민세 납부해야 하는 8월, 주민세란?

납세의무자	(개인분)	•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분)	•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과세표준 및 세율	(개인분)	• 1만원(지방교육세 미포함) ※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
	(사업소분)	•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 5만원(지방교육세 미포함)
		•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 자본금액(출자금액)에 따라 차등(※ 5~20만원)
과세기준일 및 납기	(개인분)	• 과세기준일 : 매년 7월 1일(납기 8.16. ~ 8.31.)
	(사업소분)	• 과세기준일 : 매년 7월 1일(납기 8.1. ~ 8.31.)
	(종업원분)	• 매월 납부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부과제척기간 이후 상속 · 증여세 부과 조건

- 본인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을 상속·증여
- 유가증권·서화·골동품 등을 상속·증여
- 국외에 있는 재산을 상속·증여
 - 비거주자의 국내 재산을 상속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
- 가상자산을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상속·증여



리더십 기술을 향상시키는 방법 ⑤

14. 보상 및 표창

좋은 지도자는 회원들이 소중하고 기쁘게 느끼도록 보상과 인정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실행력이 좋은 것도 사실입니다. 리더가 성공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고 도움을 제공하며 강력한 노력에 보상하도록 도와줄 때 리더가 직원을 행복하게 한다고 언급합니다. 이러한 모든 측면은 리더로서의 기술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15. 투쟁을 다루기

직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처리하고 해결하는 방식으로 리더십 기술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면 리더로서 직원과 개인적으로 대화해야 합니다. 지도자는 정직하게 말해야 하며, 덤덤하게 두들기지 말고 요점을 말해야 합니다. 리더가 문제를 해결하고 직원을 해고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좋은 리더는 결단을 내리기 전에 항상 직원의 완전한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16. 다른 사람에게서 배우기

좋은 리더십 기술은 팀원의 가치를 배우고 깨닫는 것입니다. 특정 분야에 특화된 팀원이 있다면 그에게서 매우 잘 배울 수 있고 다른 팀원들도 똑같이 하도록 부추길 수 있습니다.

17. 새로운 아이디어 시도

리더십 기술을 완벽하게 향상시키려는 사람들은 팔로워의 피드백이 중요하고 영감을 주기 때문에 기대해야 합니다. 과거에 효과적이었던 아이디어를 찾아보고 그룹 구성원을 자극하고 격려하고 보상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경계하고 찾아보십시오.

작업을 처리하는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고 성공을 위해 노력하십시오. 이것은 또한 리더십 기술을 개발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18. 최종 결과

경력 개발을 촉진하려면 우수한 리더십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리더십 기술을 향상시키고 싶다면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입증된 행동과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최 신 판 례 예 규

Marketing Tax

장기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된 후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특례 적용 안됨

재개발사업등으로 임대 중이던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에 해당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등록이 말소된 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법규재산-4847, 2022.12.13

■ 질 의

- 장기임대주택(B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2020.8.18. 전에 멸실된 후, 개정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자동말소된 경우로서 재건축 완료로 취득한 주택(B'주택)이 아파트에 해당하여 임대등록하지 못하는 경우
- 소득령 § 155<23>에 따라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A주택) 양도 시 소득령 155<20>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으로 임대 중이던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에 해당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등록이 말소된 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자와 그가 속한 법인에 소속된 다른 외부전문가(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세무확인 배제대상 외부전문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법인-4128, 2022.12.08

■ 질 의

- 질의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며 '교육·연구·진료사업'을 통한 국민 보건 향상'의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함
- 회계법인 ○○에서 질의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고 있고, 회계법인 ○○ 소속 공인회계사 2명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업무도 수행하고 있음

질의

-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자와 그가 속한 회계법인의 다른 회계사는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배제대상인지 여부 여부

■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자와 그가 속한 법인에 소속된 다른 외부전문가(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세무확인 배제대상 외부전문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민·관이 공동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에 참여한 민간기관이 관련협약에 따라 지급받는 보조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지급받는 보조금 전부가 되는 것임

사전법규부가-1001, 2023.01.19

■ 질 의

- 민·관이 공동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참여한 민간기관이 보조금(국비+지방비)을 사업비로 지급받는 경우로서
- 1. 민간참여기관이 용역(데이터허브 센터 및 메가스테이션 구축 등)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과세표준의 범위
- 2. 해당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시청(전담기관)인지 ◎◎공사(주관기관)인지 여부

■ 회 신

국토교통부와 ○○시(이하 "○○시")가 "2022년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하 "협약사업") 추진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이와 관련하여 ○○시·○○시 △△구·◎◎공사·민간참여기관이 체결한 협약에 따라 민간참여기관이 ○○시로부터 협약사업과 관련된 보조금(이하 "보조금")을 사업비로 지급받는 경우로서

1. 민간참여기관이 협약사업에 대한 단위사업을 수행하고 보조금이 사용되어 도출되는 사업성과물은 ○○시에 귀속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에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민간참여기관이 해당 단위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시로부터

터 지급받는 보조금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민간참여기관은 ○○시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가구 등을 와인과 함께 판매하는 사업장은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소비-2117, 2023.01.17

■ 질 의

- 질의법인은 가구 도소매업(쟁점사업장)을 영위하는 법인임
- 가구와 함께 와인, 치즈, 커피, 통조림, 스탠드, 액자, 카페트, 에어컨, 꽃병 등 물건을 나열하여 판매하고자 함

질의

- 가구판매업자가 쟁점사업장에서 가구와 함께 와인, 스탠드, 액자 등 상품을 같이 판매할 경우 의제주류 판매업 면허대상이 되는지 여부

■ 회 신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5항제1호가목의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이란, 한 사업장에서 일반 소비자의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식료품과 일용잡화 등을 구비하여 판매하는 상점으로서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외 대형마트, 연쇄점, 농협매장 등이 있으며, 귀 법인이 질의한 사업장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올해 서울 주민세 962억원 부과…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서울시는 16일 올해 주민세 456건, 총 962억원을 부과했다면서 이 가운데 개인분은 381만건, 221억원이고 사업소분은 75만건, 741억원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주민세는 과세기준일(7월1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사업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주,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하며 납부액은 6천원(주민세 4천800원, 지방교육세 1천200원)이다.

개인분 자치구별 부과 현황을 보면 송파구가 25만8천742건에 14억9천3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서구(22만7천694건·13억1천600만원), 강남구(20만8천76건·11억9천8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중구는 5만6천385건에 5억6천1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외국인 주민에게는 12만9천317건, 8억원이 부과됐다. 코로나19 상황이 완화하면서 전년보다 국내 거주 외국인 수가 소폭 늘어 주민세 부과액도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8만5천899건으로 3분의 2를 차지했고 자치구별로는 금천구가 1만4천561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민세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서울시 ETAX(etax.seoul.go.kr), 서울시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토스·신한카드·하나카드), 전용계좌 납부, 은행 현금인출기 등으로 낼 수 있다.

서울시는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우면 ARS(☎ 1599-3900)를 이용하면 된다면서, ETAX, STAX 납부 관련 상담도 전화(☎ 1566-3900)로 가능하다고 전했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검토… 서민 '경유'는 인하를 축소

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국제유가가 솟구치면서 2천원 휘발유가 나오는 등 유류 물가가 불안정해졌기 때문이다.

다만, 경유는 단계적으로 인하 폭을 줄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16일 관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말

에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가 필요했지만, 지난 10일 두바이유가 배럴당 89달러까지 오르는 등 유류 가격 상승세가 가파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증가율이 2.3%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물가상승세가 꾸준히 누적되고 있으며, 단기가격 변동폭이 큰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 지수는 3.9%의 고물가를 기록 중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상승률은 3.3%다.

정부는 휘발유 유류세 인하 조치는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

정부는 유종별로 세금을 휘발유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 37%를 깎아주고 있다.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 615원, 경유는 369원이다.

경유는 화물차 등 서민 자영업자와 관련돼 있지만, 경유는 울려도 버틸만하다고 보고 단계적으로 인하율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 수출기업에 23조원 금융지원한다… 시중은행도 총력

정부가 민간 금융사와 협력해 수출기업에 23조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 41조원 규모의 수출금융 지원 대책을 발표했으나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에 대한 주요국의 산업정책 변화와 공급망 불안 등 무역구조 변화가 포착되면서 민관이 협력해 수출기업에 대한 추가 금융 지원을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지난 2월 '수출전략회의'에서 발표했던 주력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 12개 분야 신수출 동력 확충, 범부처 수출 총력지원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에 따른 추가 지원 규모는 총 23조원으로 신(新) 수출 판로 개척 지원 4조1000억원+α, 수출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18조6000억원, 우수 수출기업 애로 해소(무역금융 지원) 등이 세부 방안에 포함됐다.

법인세 공제 · 감면사항

— 국세청, 2023. 8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 감면 등 조세지원 제도는 중소기업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와 중소기업 및 일반기업 모두에게 적용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 중소기업(중견기업 포함)에 적용되는 지원제도

○ 조세특례제한법

구 분	지 원 내 용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등의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및 이후 4년간 50%(75%, 100%) 세액감면(\$6)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조업 등 소득에 대해 5~30%를 세액감면(\$7)
설비투자 지원	사업용자산 등 투자금액의 3% 세액공제(舊조특법\$5)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12)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	중소 · 중견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중소 · 중견기업에 구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구매대금의 0.1%, 0.2% 세액공제(\$7의4)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	중소·중견기업이 2020.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021.1.1.~12.31. 까지 정규직 전환시킨 경우 전환인원 1인당 중소 1,000만원, 중견 700만원 세액공제 (\$30의2)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연간 임금감소 총액 × 10% + 시간당 임금상승에 따른 임금 보전액 × 15%를 세액공제 (\$30의3)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고용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50%(75%, 100%) 세액공제(\$30의4)
지방이전 지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 본사 · 공장 지방이전 시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6년(4년)간 100%, 이후 3년(2년)간 50% 감면(\$63) 2년 이상 영위한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 시 또는 산업단지 내에서 3년이상 영위한 공장을 이전 : 양도차익 5년 거치 5년간 분할 익금산입(\$85의8)
최저한세 적용한도 우대	최저한세율을 일반법인에 비해 3~10% 우대

●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지원제도

○ 조세특례제한법

구 분	지 원 내 용
상생협력에 대한 조세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 등에 2022.12.31.까지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액의 10%를 세액공제(\$8의3) ○ 협력중소기업에 유형고정자산을 무상임대하는 경우 장부가액의 3% 세액공제(\$8의3)
연구·인력 개발에 대한 과세이연 및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①+②+③(\$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 당기발생액 30%+(당기발생액/당기수입금액*3, 10%한도) * (코스닥상장중견) 당기발생액 25%+(당기발생액/당기수입금액*3, 15%한도) * (대기업 및 기타 중견기업) 당기발생액 20%+(당기발생액/당기수입금액*3, 10%한도) ②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기발생액 30%(중소 40%)+(당기발생액/당기수입금액*3, 10%한도) ③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기분방식 : 당해연도 지출액 ×(중소25%, 중견 8%, 일반 수입금액대비발생액비율*2%) * 증가분방식 : (당해연도 지출액 - 직전 과세연도 지출액) ×(중소 50%, 중견 40%, 일반 25%) ○ 연구개발출연금 등에 대한 익금불산입(\$10의2)
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에 대한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기술 및 연구소 기업에 대하여 3년간 법인세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12의2)
M&A 활성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혁신형 합병·주식취득에 대해 지급한 인수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12의3, \$12의4)
시설투자 등에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시설투자 금액 *기본공제율 + 추가공제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초과분의 3%(국가전략 4%) 추가공제(기본공제의 2배 한도)(\$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일반 대 1%, 중견 3%, 중소 10% ② 신성장·원천기술 3%, 5%, 12% ③ 국가전략기술 6%, 8%, 16%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5%(중견 10%, 중소 20%)세액공제 + 정규직 전환근로자의 전년대비 임금증가액 합계*5%(중견 10%, 중소 20%)추가공제(\$29의4)
공장(본사) 등 지방이전 세액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 본사·공장 지방이전 시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7년간 100%, 그후 3년간 50% 감면(\$63)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농조합법인(\$66), 영어조합법인(\$67)의 농어업소득은 100% 및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조합원 1인당 1,200만원 한도로 감면 농업회사법인(\$68)의 농업소득은 100%,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및 이후 4년간 50% 감면
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에 대한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첨단기술 및 연구소 기업에 대하여 3년간 법인세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12의2)
공장(본사) 등 지방이전 세액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장(본사) 지방이전 시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6(4)년간 100%, 이후 3(2)년간 50% 세액감면(\$63의2)
농공단지 등 입주 기업에 대한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 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및 이후 4년간 50% 감면(\$64)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의 밖 공장이전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4년간 50%감면(\$85의2)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거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법인은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85의6) * 최저한세 적용 배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또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은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121의8,9)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등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등에 대해 3년간 100%(50%), 이후 2년간 50%(25%) 감면(\$121의17)
전자신고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이 직접 법인세를 전자신고 시 2만원 세액공제(\$104의8)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제3자에게 위탁한 물류비 증가액의 3%(중소 5%) 세액공제(해당 과세연도 법인세의 10% 한도)(\$104의14)
구조조정 및 재무구조개선 등을 촉진하기 위한 과세이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도차익 등에 대한 손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33, \$34, \$38의2,3, \$39, \$40, \$44, \$46, \$47의4, \$52 등)
지방이전 등을 촉진하기 위한 과세이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이전 등을 촉진하기 위한 양도차익 등의 손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60, \$63의2, \$85의2,7등)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액(공제기간 : 2020.1.1.~2023.12.31.)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96의3)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기간(고용위기 1년, 산업위기 2년) 내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99의9)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4~7월 중 선결제하고 2020.7~12월 중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 선결제액의 1% 세액공제(\$99의12)

● 법인세법

구 분	지 원 내 용
재해손실세액공제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해 사업용 총자산가액의 20%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상실비율에 해당하는 법인세 공제(\$58)
외국납부세액공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 공제(\$57,\$57의2)

● 공제감면 항목별 상세내용

○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조세특례제한법 § 7)

- 대상 법인
 -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 수도권에 소재하는 소기업(지식기반산업은 중기업까지 포함)
- 대상 업종

1. 작물재배업
2. 축산업
3. 어업
4. 광업
5. 제조업
6. 하수 · 폐기물 처리 · 원료재생(재활용을 포함) 및 환경복원업
7. 건설업
8. 도매 및 소매업
9. 여객운송업
10. 출판업
11. 영상 ·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
12. 방송업
13. 전기통신업
14. 컴퓨터 프로그래밍 ·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5. 정보서비스업
16. 연구개발업
17. 광고업
18.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9. 포장 및 충전업
20. 전문디자인업
21.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
22. 수탁생산업
23. 엔지니어링사업
24. 물류산업
25. 직업기술 관련 학원 및 훈련시설
26.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27. 선박관리업



28. 의료기관 운영사업
29.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
30.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업
31. 전사산업
32.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
33.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
34.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35.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 사업
36.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37.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38.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39. 사회복지 서비스업
40. 무형재산 임대업
41. 연구개발지원업
42. 개인간병 및 유사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도서관 · 사적지 및 유사여가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 제외)
43. 주택임대관리업
44. 신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45.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46. 임업
47.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48. 자동차임대업

－ 소기업 판정기준

- 업종별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함(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봄)

* (제조업 등) 120억원 이하 / (농 · 임 · 어 · 광업, 건설 · 운수업, 기타 제조업 등) 80억원 이하 / (도 · 소매업, 출판 · 영상 등) 50억원 이하 등

－ 감면내용

업종구분	중기업		소기업	
	수도권	수도권 밖	수도권	수도권 밖
도소매/의료업	-	5	10	10
지식기반산업	10	15	20	30
기타업종	-	15	20	30
통관대리 관련 서비스	-	7.5	10	15

* 사업장별로 판단(단, 본점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간주)

－ 감면 한도 : 1억원

- 단, 전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1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원

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함

업종구분	중기업		소기업	
	수도권	수도권 밖	수도권	수도권 밖
알뜰주유소	10	15	20	20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 6)

－ 감면 대상법인

- (창업중소기업) 제조업 등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6③ 각 호에 열거(제조업, 건설업, 전기통신업 등 18개 업종)

-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감면대상 업종 영위 창업중소기업

* 벤처기업법 §2①에 따른 벤처기업 중 같은 법 §2의2 요건(같은 조 1항 제2호 나목은 제외)을 갖추거나 연구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5% 이상인 법인

1. 광업
2. 제조업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물류산업(비디오물 감상실 제외)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9.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엔지니어링사업 포함, 변호사업 등 일부 업종 제외)
11.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해당하는 업종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등 일부 업종 제외)
14.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15.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16. 관광숙박업 · 국제회의업 ·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18. 전산업

-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5⑪에 따른 중소기업

－ 감면 내용

- 【기본감면】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 중소기업	창업보육 센터 사업자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청년창업 1)	수입금액 4,800 만원 이하 ³⁾	그 외	청년창업	수입금액 4,800 만원 이하 ³⁾	그 외			
5년 100% ²⁾	5년 100%	5년 50%	5년 50%	5년 50%	-	5년 50%	5년 50%	5년 50%

- 1) (청년창업) 창업 당시 대표자가 15~34세 이하(병역기간 최대 6년 차감), 법인의 경우 최대 주주 등일 것
 - 2) '18.5.29 이후 창업부터 적용, '18.5.28 이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3년간 75%, 그 후 2년간 50% 감면
 - 3)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 과세연도 중 수입금액이 연간 기준 4,800만원('22.1.1. 이후 개시사업연도부터 8,000만원) 이하인 과세연도에 적용('18.5.29 이후 창업부터)
- 신성장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후 2년간 75%, 그 이후 2년간 50% 세액감면

* S/W개발업 등 「조세특례법 시행령」 제5조 제12항에 열거된 업종

* 청년창업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제외

• 【추가감면】

-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을 충족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증가하는 경우 고용증가율에 따라 25~50% 추가감면
- *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 10인 이상, 기타 업종 : 5인 이상
- *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감면적용을 받는 기업은 제외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중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

[사례]

- 제조업으로 '18년 창업한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가 지속 증가한 경우[('20) 10명 → ('21) 15명 → ('22) 20명]
 - ('20 과세연도) 50% 감면
 - ('21 과세연도) 50% + 추가감면율 25%(50%×1/2) = 총 75%감면
 - ('22 과세연도) 50% + 추가감면율 16.7%(33%×1/2) = 총 66.7%감면
 - 최소고용인원 미만인 제조업 창업 기업이 고용 증가로 최소고용인원 이상을 고용한 경우 [('21) 8명 → ('22) 16명]
 - ('21 과세연도) 50% 감면
 - ('22 과세연도) 50% + 추가감면율 30%(60%×1/2) = 총 80% 감면
- * 최소고용인원 10명을 기준으로 6명(60%) 증가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10)

- 지원내용 : 다음 공제내용 중 선택한 금액을 세액공제
- 대상법인 : 내국인(거주자 + 내국법인)
- 공제내용

중소기업	<p>연구인력개발비의 일정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세액공제액 = (1) + (2) + (3)</p> <p>(1)신성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 × 최대 40%* * 30% + (수입금액 대비 신성장 R&D 비중 × 3배)</p> <p>(2)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 최대 50% 40% + (수입금액 대비 국가전략기술 R&D 비중 × 3배)</p> <p>(3)max (①증가분 방식, ②당기분 방식)</p> <p>① 직전연도 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한 금액의 50% ② 당해연도 연구·인력개발비의 25%</p> <p>•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 : 13개 분야 272개 기술(조특령 별표7) • 국가전략기술의 범위 : 4개 분야 43개 기술(조특령 별표7의2)</p>
일반기업	<p>• 연구인력개발비의 일정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세액공제액 = (1) + (2) + (3)</p> <p>(1)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최대 30%* 공제 * 20%+(매출액 대비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비중×3배) * 코스닥상장 중견기업은 최대 40%(25%+α)</p> <p>(2)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 최대 40% * 30% + (수입금액 대비 국가전략기술 R&D 비중 × 3배)</p> <p>(3)max (①증가분 방식, ②당기분 방식)</p> <p>① 직전연도 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한 금액의 25%(중견 40%) ② 당해연도 연구·인력개발비의 최대 2%(중견 8%)</p> <p>* 기본 0% + (매출액 대비 R&D 비중 × 1/2, 최대 2%)</p>

- 세액공제대상비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 연구개발 : 연구개발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 재료비 시설임차비 및 이용료, 특정연구기관 등에 지출한 기술개발 위탁비
- 인력개발 :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대학 등 위탁교육훈련비, 직업 훈련기관 위탁훈련비 등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시 유의사항

- R&D비용 세액공제의 증가분방식 산식 조정
 [당해연도 R&D비용 - 직전 3년 평균 R&D비용('13년) → 2년 평균('14년) → 직전연도('15년 이후)] × 25%(중소기업 50%)
 다만, 소급 4년간 R&D비용이 발생하지 않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R&D비용이 소급 4년 평균 R&D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가분방식 적용 배제
- 정부출연금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는 2013.1.1.이후 개시 과세연도 분부터 연구·인력개



발비 세액공제 배제됨

* 종전에는 조특법§10의2에 열거된 출연금만 배제

- 연구·인력개발비 인건비에 퇴직소득,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제외
- 위탁연구개발비 중 국내외 기업의 전담부서 등에 위탁·재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하여 적용됨
- 당초 지원대상인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 외에 연구개발서비스업 중 연구개발업의 자체연구개발이 추가됨
 - * '14.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를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인력개발비로 한정함
 - * '14.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인건비 공제대상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연구관리직원 제외함
 - * '16.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29의7)

- 감면대상 법인 :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제외)
- 감면 내용
 -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한 고용인원 1인당 아래 금액을 공제
 - * 종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하여 고용증대세제로 전환되었으며,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증가인원 당 일정금액을 공제
 - 고용인원이 감소되지 아니한 경우 대기업 2년, 중소·중견기업 3년 적용

<고용증대 세액공제금액>

(만원)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청년정규직, 장애인근로자 등 외	700	770	450	450	-	-
청년정규직, 장애인근로자 등	1,100	1,300	800	900	400	500

* 청년정규직 근로자란 15세이상 29세 이하로써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청소년유해업소 근무 청소년 등을 제외한 근로자

* 장애인근로자란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②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③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 ④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 ⑤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 ⑥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최저한세(조세특례제한법 §132)

- 최저한세란?
 - 정책목적상 조세특례제도를 이용하여 세금을 감면하여 주는 경우에도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적용대상 법인
 -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비영리법인 포함)
 - ※ 조특법 제72조 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
 - 법인세법 제91조 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법인
- 최저한세 계산구조
 - 최저한세 = max(①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 후 세액, ②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 전 과세표준 × 최저한세율) + 가산세 등 - 외국납부세액 등
- 최저한세율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3년	'14년 이후
중소기업		8%	8%	7%	7%	7%	7%
일 반 기 업	중소 유예기간 후 1~3년	신설			8%	8%	8%
	중소 유예기간 후 4~5년				9%	9%	9%
	과세표준 100억 이하	13%	11%	10%	10%	10%	10%
	과세표준 1천억 이하	11%	11%	12%	12%		
	과세표준 1천억 초과	15%	15%	14%	14%	16%	17%

참고 1. 수도권, 지식기반산업, 소비성서비스업

- 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전지역
- 지식기반산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
 - 1. 엔지니어링사업, 2. 전기통신업, 3. 연구개발업,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6. 전문디자인업, 7.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8. 광고물 작성업, 9.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0. 방송업, 11. 정보서비스업, 12.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13.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14.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 소비서비스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29③)

1. 호텔업 및 여관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제외)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 제외)

참고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6①1호)

< [별표 1]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 (' 17.6.20 개정) >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p>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데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p>	<p>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남양주시(와부읍, 진접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읍 및 오남읍만 해당한다) 용인시(신갈동, 하갈동, 영덕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지곡동, 공세동, 고매동, 농서동, 서천동, 언남동, 청덕동, 마북동, 동백동, 중동, 상하동, 보정동, 풍덕천동, 신봉동,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성북동, 남사면, 이동면 및 원삼면 목신리·죽릉리·학일리·독성리·고당리·문촌리만 해당한다) 연천군 포천시 양주시 김포시 화성시 안성시(가사동, 가현동, 명륜동~내강리 등, 동 이름 지면상 생략하였음) 인천광역시 중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 남동 국가산업단지 시흥시 중 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p>	<p>이천시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만 해당한다) 용인시(김량장동, 남동, 역북동, 삼가동, 유방동,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만 해당한다)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광주시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매산리·장릉리·장원리·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덕산리·울곡리·내장리·배태리만 해당한다)</p>

국세청, 끊임없는 변화 · 혁신으로 경제정책 적극 지원

— 국세청, 2023. 8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8. 10.(목) 2023년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역점 추진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 ① 신속·공정한 심사행정 운영을 통한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붙임1]

② 복원과 도약을 위한 수출기업 세정지원 방안[붙임2]

- 국세청은 새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간의 주요 추진성과를 점검 · 평가하는 한편, 하반기에도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 노력으로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고 정부의 경제정책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다짐하였습니다.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주요내용

① 수준 높은 디지털 납세서비스로 세입예산 조달 노력

- 하반기 주요세목 신고 · 납부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세수추이와 우발요인을 철저히 점검하는 등 세수관리에 최선의 노력
- 보다 쉽고 편리한 전자서비스 구현을 위해 「사용자 중심 홈택스 개편 TF」를 지속 추진하고, 「세금비서*」 서비스도 확대

* 신고서의 항목을 일일이 찾아 입력하지 않아도 질문에 답변만 하면 자동으로 완성되는 서비스

② 납세자 권익 보호 및 성실납세 문화 조성

- 소액사건 전담반(5천만 원 미만)을 통한 심사사건 조기 처리, 영세납세자를 위한 무료 국선 대리인 지원대상 확대*에 대한 안내 강화

* 영세 개인납세자의 불복 중 (기존) 청구세액 3천만 원 이하 → (확대) 5천만 원 이하

- 성실납세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납세자 포상제도 개편 추진

* (포상 통합) 각각 운영 중인 모범납세자·아름다운납세자 통합

(기준 다양화) 납부세액 등 정량평가 축소, 기업의 재기노력, 사회공헌 등 비중 확대
(훈격 상향) 납세규모와 별개로 성실납세 근로자, 기부·봉사자에 대한 훈격 상향



(공감대 확산) 수상자의 역경 극복, 사회공헌 노력 등을 담은 스토리텔링 영상 제작

③ 수출·투자 지원 및 복지세정 강화

- 금년에 신설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혁신성장기업, 수출기업 등에 대한 체계적인 세정지원을 지속 실시
 - － 하반기에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신소재, 에너지·자원 절약 등 신기술 및 녹색기술 인증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에 추가
- 우리 술 해외진출을 위해 민관 협업 기반의 「K-Liquor 수출지원 협의회」를 중심으로 수출 노하우를 공유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 추진
-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에 동의한 고령자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신속한 심사를 통해 최대한 앞당겨 지급**

* 65세 이상 고령자·중증장애인이 동의하면 향후 2년 간 직권신청(신청안내 대상인 경우)

** ('22년 귀속 정기) 총 324만 가구 신청, 약 257만 가구에 2조 7,750억 원 지급 예상

④ 공평과세 실현 및 공정한 시장경제 기반 강화 뒷받침

- 하반기에도 총 세무조사 규모 감축 기초를 지속 유지(역대 최저수준)
 - * 총 조사건수(건) : ('19) 16,008 → ('20) 14,190 → ('21) 14,454 → ('22) 14,174 → ('23 계획) 13,600
- － 다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 민생 밀집분야 탈세, 역외탈세, 신종산업 탈세 등에는 강력 대응
- 공익법인의 성실공시를 지원하고, 회계부정·사적유용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검증을 강화하여 혐의 확인 시 3년간 개별검증 실시
- 먹튀주유소, 주류 관련 불법 리베이트 등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산업과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국세통계 서비스 확대

⑤ '일 잘하는 국세청' 구현을 위한 소통과 혁신 강화

- 일하는 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등 직원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신규직원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보직관리 방안 마련
 - * 직원의 수요를 반영한 복지교실 확대, 성장단계별 교육 내실화, 청사환경 개선 등
- 반부패·청렴 관련 법령과 사례를 중심으로 관서장·중간관리자 대상 교육을 강화하여 관리자가 앞장서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I 회의 개요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8.10.(목) 세종 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하고, 중점 추진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다짐하였습니다.
- 회의를 주재한 김창기 국세청장은,
 -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납세편의 제고, 민생경제 지원, 공정과세 실현, 소통문화 확산 등 본연의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한 2만여 국세공무원에게 감사를 표하고,
 - '23년 하반기에도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인공지능 등 기술 발전, 더욱 높아진 국민 눈높이 등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한 내실 있는 세정운영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수준 높은 디지털 납세서비스를 통해 성실신고를 지원하여 소관 세입예산을 조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향후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능형 홈택스' 구축에도 박차를 가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 범정부적인 수출·미래성장 지원을 국세행정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고, 근로·자녀장려금 및 실시간 소득과약 제도의 원활한 집행 등 복지세정도 강화해 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규모 감축 기조를 유지하되, 지능적·악의적 탈세가 근절될 수 있도록 엄정히 대응하고,
 - 건전한 기부문화 지원, 거래질서 문란행위 엄단, 국세통계 서비스 확대 등 공정한 시장경제 기반 강화를 뒷받침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일 잘하는 국세청'을 구현하기 위해 직원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민원업무 수행과 그 과정에서의 직원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도 마련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II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요약)

1 지난 1년간의 주요 추진성과

1. 성실납세 지원

-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주요 세목에 대한 신고업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등 소관 세입예산 조달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 주요 세목별 신고기간 및 신고대상 /

세 목	부가가치세 (‘22.2기)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23.1기)
신고기간	‘23.1월	‘23.3월	‘23.5월	‘23.7월
신고대상 (전년(동기)대비)	866만 명 (6.0%↑)	107만 개 (6.7%↑)	1,173만 명 (14.8%↑)	645만 명 (5.2%↑)

- 연말정산 자료 일괄제공, 질문에 답변하면 신고서가 자동으로 완성되는 세금비서 서비스 최초 도입 등 납세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 ‘22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 (대상) 연말정산 프리패스, (은상) 똑똑한 AI 세금비서 등

2. 경제활력 뒷받침

- 세무서 포함 전국 관서에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수출과 미래성장 뒷받침을 위한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 * (세정지원) 납부기한 연장 및 환급금 조기지급, 경정청구 우선처리, 맞춤형 세무상담 등
-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 및 세무검증 배제 등 전방위적 세정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 전세피해 방지의 일환으로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전국 세무서에서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 미납국세열람 : (‘21) 111건 → (‘22) 159건 → (‘23.1분기) 107건 → (‘23.2분기) 3,215건
- 장려금 자동신청을 최초 도입하고, 문자·국민비서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안내 및 심사 일정 단축을 통해 신속하게 지급하였습니다.
- * (‘21년 귀속) 499만 가구, 4조 9,837억 원, (‘22년 귀속 반기) 205만 가구, 2조 2,906억 원

3. 공정과세 구현

- 우리경제의 복합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연간 총 조사규모를 지속 감축하면서 신중하고 공정하게 운영하였습니다.
-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불공정 탈세,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탈세, 민생 밀집분야 탈세, 신종호황업종 탈세 등에 엄정 대응하였습니다.
- 타인명의·변칙적 수법 등을 이용한 악의적 체납에 기획분석 및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현장추적·징수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 「공익법인 종합안내 포털*」을 개통하여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한편, 회계부정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에 대해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 * (‘23.3월 개통) 공익법인의 각종 신고의무와 세무도움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접근 가능
- 과세품질 평가*를 강화하고, 「중요사건 법리검토 TF」를 신설하는 등 과세행정 전반의 책임

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 (기존) 직원별 총 고지액 중 심사·심판결과만 반영 → (개선) 심사·심판·소송결과 반영

4. 변화·혁신 노력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성과 창출을 위해 소통과 실용 기반의 「국세행정 역량강화 TF」를 신설하여 내실있게 운영하였습니다.
- 간담회·현장방문 등을 통해 총 181건의 과제를 발굴('23.1월)하였으며, 현재 시행완료 93건(53%), 연말까지 171건(94%) 완료 예정입니다.
- 2022년 정부업무평가에서 정부혁신1」(행안부 주관)과 적극행정2」(인사처 주관) 두 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23.3월)
 - 1」 '18~'22년 평가기간 총 5년 중 4년간 정부혁신 우수기관 선정
 - 2」 '20년 적극행정 부문 신설 이후 국세청 최초로 우수기관 선정

2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향

- 지난 1년간 4대 운영방향*을 중심으로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

* ① 납세편의 제고, ② 민생경제 지원, ③ 공정과세 실현, ④ 소통문화 확산

- '23년 하반기에도 그간의 추진성과를 면밀히 점검·관리하는 가운데,
 - 경제여건 불확실성, 인공지능 등 기술발전, 더욱 높아진 국민 눈높이 등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한 내실 있는 세정운영 추진

3 핵심 추진과제

1. 수준 높은 디지털 납세서비스로 세입예산 조달 노력

- ① 소관 세입예산 조달을 위한 치밀한 세수관리
 - 하반기 주요세목 신고·납부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세수추이와 우발요인을 철저히 점검하는 등 세수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민관합동 세수추계위원회(기재부 주관)에 세정현장 의견을 적극 전달하여 세수 재추계 작업과 내년 세입예산안 편성을 지원하겠습니다.



② 디지털 시대에 발맞춘 수준 높은 전자신고 서비스 구현

- 「사용자 중심 홈택스 개편 TF」를 지속 추진하고, 향후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사용자별 요구를 파악해서 맞춤형 메뉴를 추천하는 '지능형 홈택스'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 「사용자 중심 홈택스 개편 TF」 하반기 주요 개선과제 /

- ▶ 사업자등록 신청 개선(대화형 신청방식 적용, 작성사례·자가검증 제공 등)
- ▶ 홈택스 포털 개선(납세자 맞춤형 메뉴 제공, 검색화면 추가, 메인화면 재배치 등)
- ▶ 챗봇 기능 정교화(안내문구 개선, 처리기능 추가 탑재 등)
- ▶ 세목별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 자동계산 기능 개발

- 일반 부동산임대업자 부가세 신고, 단일업종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기타 특정서식* 신고까지 세금비서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 ① 확정신고서, ②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③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④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명세서, ⑤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

-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원사이트 토털 서비스)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사업자등록증명 발급, 환급금 찾기 등 납세서비스 제공 예정(총 10종)

- 신종 사이버위협으로부터 정보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진단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기반 보안관계 체계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③ 납세자 맞춤형 신고 안내를 통한 성실납세 지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신고안내를 강화하고, 주요업종의 신고방법을 사례 형식으로 설명하는 소책자·동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 골프장 캐디, 배달라이더, 퀵서비스 배송원, 대리운전기사, 수화물 운반원 등

- 과세정보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감면 혜택 안내,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실효성 높은 신규 안내항목도 발굴하겠습니다.

/ 하반기 주요 빅데이터 분석과제 /

- ▶ 고령자·경력단절여성·장애인 등에 대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안내
- ▶ 기업유형(소·중·중견) 판단시스템 정교화로 기업 유형에 맞는 공제·감면 제도 안내
-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임차 분석을 통한 매입세액공제대상 여부 안내

2. 납세자 권익 보호 및 성실납세 문화 조성

① 신속·확실한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 영세납세자가 많은 5천만 원 미만의 소액 심사사건을 「소액사건 전담반('23.4월)」을 통해 집중 심리하여 조기에 처리하겠습니다.

- 올해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영세납세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사례, 이용방법 등 안내를 강화하겠습니다.
- * 영세 개인납세자의 불복 중 (기존) 청구세액 3천만 원 이하 → (확대) 5천만 원 이하

② 국민이 공감하는 성실납세 우대제도 마련

-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확대하고, 성실납세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납세자 포상제도를 새롭게 개편하겠습니다.

/ 모범납세자 포상제도 주요 개편 방향 /

- [포상 통합] 각각 운영 중인 모범납세자·아름다운납세자 통합
- [기존 다양화] 납부세액 등 정량평가 축소, 기업의 재기노력, 사회공헌 등 비중 확대
- [훈격 상향] 납세규모와 별개로 성실납세 근로자, 기부·봉사자에 대한 훈격 상향
- [공감대 확산] 수상자의 역경 극복, 사회공헌 노력 등을 담은 스토리텔링 영상 제작

3. 수출 및 투자지원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① 수출 및 미래성장 지원을 위한 세정지원 확대

- 금년에 신설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혁신성장기업, 수출기업 등에 대한 체계적인 세정지원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 * 신소재, 에너지·자원 절약 등 신기술 및 녹색기술 인증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에 추가

/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 주요 세정지원 /

공통	유동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면제, 압류·매각 유예, · 경정청구 우선처리, 환급금 조기지급
	경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처리, 신고내용확인 제외, · 맞춤형 세무정보 분기별 제공
추가	맞춤형 세무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신산업기업) 홈택스 전용상담 서비스 제공 · (구조조정기업) 구조조정 관련 세무쟁점 상담지원

- 우리 술 해외진출을 위해 민관 협업의 「K-Liquor 수출지원 협의회」를 중심으로 노하우를 공유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겠습니다.

②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지원

-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의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어려워하는 공제·감면제도는 전담팀이 컨설팅을 신속히 제공할 예정입니다.



4. 민생지원을 위한 복지세정 강화

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지급업무의 차질없는 집행

- 장려금 자동신청에 동의한 고령자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신속한 심사로 법정기한(9.30.)보다 앞당겨 지급하겠습니다.

* ('22년 귀속 정기) 총 324만 가구 신청, 257만 가구 지급, 지급액 2조 7,750억 원 예상

② 인적용역자 환급금 찾아주기 지속 추진

- 최근 5년간('18~'22귀속) 찾아가지 못한 소득세 환급액을 계산하여 모두채움으로 신고 안내하고 9월 추석 전까지 신속히 지급하겠습니다.

5. 고의적 탈세·체납 엄단으로 공평과세 실현

① 신중하고 공정한 세무조사 운영

- 경제 위기·글로벌 경기둔화 등을 고려하여 총 조사규모를 역대 최저 수준인 13,600건까지 축소하여 신중하게 운영하겠습니다.

* ('19) 16,008 → ('20) 14,190 → ('21) 14,454 → ('22) 14,174 → ('23계획) 13,600

- 중소납세자에 대한 간편조사 확대, 시범운영 중인 「간편조사 시기선택제」를 전 세무관서로 확대하는 등 조사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② 악의적 탈세에는 조사역량 집중하여 엄정 대응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 민생 밀집분야 탈세, 신종산업 탈세 등에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에 대비하여 세무서에 포렌식 조사지원을 본격화하고, 분석지원 시스템*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자료상 분석 시스템, 겸직 지배주주 적정급여 분석 시스템, 가상자산 통합분석 시스템 등

③ 지능적 역외탈세와 공격적 조세회피 근절

- 가상자산·고가동산과 같은 새로운 자산과 해외 시민권을 이용한 탈세 등 신종 역외탈세 유형을 포착하여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 해외 부동산을 이용한 편법증여 방지를 위해 신고검증 사각지대인 해외부동산 취득자금 증여혐의 및 자금출처*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 해외부동산 미신고 및 해외보유 자산 대비 소득이 낮은 혐의에 대한 점검

④ 전략적 체납관리를 통한 고액·상습 체납행위 강력 대응

- 특수관계자와의 가등기 설정, 변칙적 부동산 단기양도 등 악의적 재산은닉 행위를 집중분석

하여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겠습니다.

- 타인명의 고가주택 거주자, 호화생활 영위자 등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고액채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6. 공정한 시장경제 기반 강화 뒷받침

① 공익법인 성실공시 지원 및 불성실 공익법인 검증 강화

- 공익법인이 중요 재무정보를 정확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주석 표준안을 도입하고, 신규법인에 대한 분기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 회계부정·사적유용 혐의 있는 공익법인에 검증을 강화(분석기법 개선, 검증항목 추가)하고, 혐의 확인 시 3년간 개별검증을 실시하겠습니다.

②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엄정 대응

- '먹튀주유소' 근절을 위한 조기 대응체계를 전면 가동하고, 불법리베이트 등 주류 거래질서 문란행위에 강력 대처하겠습니다.

③ 산업 및 연구 지원을 위한 국세통계 서비스 확대

- 국민관심도가 높은 100대 생활업종의 업종별·지역별 매출수준 등을 알 수 있는 신규 통계 콘텐츠를 개발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7. '일 잘하는 국세청' 구현을 위한 소통과 혁신 강화

①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업무혁신 지속 추진

- 중복결재 축소를 통해 업무를 효율화하고, 현장의 업무애로를 적극 해소하는 등 소통·공감 기반의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 신규 직원의 보직관리를 개편하여 우수인력으로 육성하고, 복지교실 확대 및 청사환경 개선 등 직원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②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 추진

- 반부패·청렴 관련 법령과 사례를 중심으로 관서장·중간관리자 대상 교육을 강화하여 관리자가 앞장서는 청렴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교육 및 퇴직공직자 취업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 세부내용은 별첨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신속·공정한 심사행정 운영을 통한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요약)

1 추진 배경

- 국세청은 위법·부당한 국세행정으로 인해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조세처분의 취소·변경 등을 청구하는 불복제도 운영
- 신속한 납세자 권리구제를 통해 신뢰받는 국세행정이 구현되도록 신속하고 공정한 불복처리 방안 모색 필요

2 신속성 강화 전략

- (의견서 신속 제출 촉구) 처분청이 의견서를 기한 내 미제출 시, 촉구 절차를 마련하고 촉구기한 경과 시 심리 절차 진행 규정 신설
 - * 처분청의 의견서 제출기한 미준수 관행 시정 및 적법절차 준수 유도
- (소액사건 신속처리) 신속한 불복처리를 위해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조기 결정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¹⁾ 기준금액 상향²⁾ 법령 개정 추진
 - 1) 3천만원 미만으로서 사실판단 사항이거나 위원회 거쳐 결정된 유사사례가 있는 경우
 - 2) (현행) 3천만원 미만 → (개정) 5천만원 미만
- (조기처리 분석반) 조기처리 시 심리담당 1인의 판단에 따른 오류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분석반을 이의신청까지 확대*
 - * (현행) 과세전적부심, 심사청구 → (개선) 과세전적부심, 심사청구, 이의신청
- (포상확대 및 평가개선) 불복분야 포상 규모를 6배 확대하고, '기한내 처리' 뿐 아니라 '장기미결 신속처리'도 함께 평가
 - * (이전) 연 2명 → (개선) 연 12명 (상반기 6명, 하반기 6명)
- (전문인력 우선배치) 심사전문요원 등 심사분야 전문가를 납세자보호실에 우선 배치하여 신속하면서도 공정한 불복처리 도모
- (심사사례집 발간·교육) 상반기 발간한 「주요 쟁점별 심사사례집」을 관서별 직무교육 교재로 활용하여 직원 업무역량 향상 도모

3 공정성 확보 전략

- (국선대리인 조력) 국선대리인 지원 요건 중 청구금액 기준*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영세납세자의 세무대리인 조력권 실질적 보장
 - * (현행) 3천만원 이하 → (개정) 5천만원 이하
- (재결정 선택권 확대) 보다 많은 납세자가 본청 과세전적부심 심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본청 청구 대상을 확대*하는 법령 개정 추진

- * 본청 청구대상 : (현행) 청구금액 10억원 이상 → (개정) 청구금액 5억원 이상
- (직권심리 활성화) '인용목적 증거조사' 정성 평가 시 직권심리 노력을 평가에 고려하여 심리담당자들의 직권심리 노력도 제고
- * 심리담당이 인용을 목적으로 증거를 검토하고 결과보고서 제출
- (우수사례 선발·공유) '불복심리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포상 및 전파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심리품질 제고
- (위원회 인력풀 확대) 민간위원 수를 확대하고 세무·회계 분야의 학식·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위촉으로 위원회 전문성 강화
- * (국세청) 24명 → 30명, (지방청) 20명 → 25명, (세무서) 16명 → 20명

4 상반기 추진실적

- 신속한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한 상반기 시행 결과,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사건의 기한내 처리율과 평균처리일수 실적 개선
- * (기한내 처리율) 이의신청 8% 상승, 과세전적부심 1.9% 상승
- ** (평균처리일수) 이의신청 7일 감축, 과세전적부심 1일 감축, 심사청구 2일 감축
- 국선대리인 지원 요건 완화 및 조기 홍보 등으로 영세납세자 불복대리 지원실적도 3년 동기 평균 대비 35.1%(174건→235건) 증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23.8.16. ~ 9.25.)

— 금융위원회, 2023. 8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6월에 발표한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23.6.12)에 포함된 정책과제를 법제화하기 위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23.8.16.~'23.9.25.)를 진행한다.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시기를 '24년에서 '29년으로 5년 유예한다.

다만,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계획대로 금년부터 도입하되, 예외적으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유예를 신청한 기업에 한해 심사를 거쳐 2년간 유예를 허용한다.

유예를 원하는 기업은 외부감사인인 의견서를 첨부하여 신청기간 내(9.1~9.8일) 금감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에 심사를 신청(별도 신청서식 작성)해야 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유예 적용 방식을 위해 심사기준*을 충족한 기업에 대해서만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 의결('23.11월 잠정)을 거쳐 2년간의 유예(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4년 말까지)를 허용하고, 유예 기업에 대해서는 유예사실과 유예사유 등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토록 할 방침이다.

* 심사기준(안) : ①23년중 중요한 자회사 취득으로 연결내부회계 구축에 절대적 시간이 부족한 경우, ②자산 2조원을 약간 상회하는 기업으로서 차기년도에 자산 2조원 미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거나, 최근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연결 준비가 부족하여 유예기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 당초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연결내부회계 도입 유예신청 여부는 기업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려 했으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달라는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동 심사기준(안)을 마련

☞ 상세내용(신청방법 및 서식, 심사기준 등)은 붙임 참조

둘째, 감사인 직권지정사유 중 하나인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를 폐지한다.

종전에는 기업이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증선위가 다음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직접 지정하였다. 그러나, '투자주의환기종목'은 회계부정 발생 가능성과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음에도 직권지정사유가 되어 기업에 필요 이상의 부담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를 폐지한다. 한편, 직권지정사유로서 "관리종목 지정"은 유지되는 만큼 투

자 보호에는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시행령에 근거한 기타 직권지정사유는 "폐지 후 과태료 전환" 예정으로 우선 외부감사법 개정을 통해 과태료 부과근거를 마련한 후 폐지 셋째, 표준감사시간 심의위원회*의 중립성을 강화한다.

* 기업계(5명), 회계업계(5명), 회계정보이용자(4명), 금감원(1명) 등 총 15명(공인회계사회 내) 그동안 공인회계사회장(위원장)이 추천한 '회계정보이용자' 위원 규모를 4명에서 2명으로 축소(2명 중 1명은 학계인사로 추천)하고, 추천기관을 공인회계사회장에서 금감원으로 변경한다. 이는 공인회계사회장이 위촉한 위원(9명, 회계업계(5명)·정보이용자(4명))과 금감원 위원(1명)만으로 기업계(5명) 참석 없이도 회의 개최 및 결의가 가능*하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 심의위는 전체 위원 2/3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넷째, 거래소 내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를 지정감사인과 기업 간 중립적인 분쟁조정기구로 활용한다.

금감원과 공인회계사회에 분산되어 있는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 및 분쟁조정업무를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한국거래소, 이하 '거래소')로 일원화하고, 감사인의 권한남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선위(금감원·공인회계사회에 위탁)에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거래소에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따른 분쟁의 자율조정업무를 위탁하고,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를 통한 구체적인 조정절차와 방식*은 하위규정('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외부감사규정') 개정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 (조정 프로세스(안)) ①신고접수(사실관계 확인) → ②1차 조정(실무차원 조정안 제시) → ③2차 조정(전문가회의체를 통한 조정) → ④(조정 불성립시) 금감원·공인회계사회에 이첩 및 제재조치 건의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8.16(수)부터 9.25(월)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차관회의 의결 등을 거쳐 '24년 1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외부감사규정 등 하위규정도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시기('24.1월)에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조속히 밟아 나갈 계획이다.

< 입법예고 관련 안내사항 >

· 입법예고는 '23.8.16일~'23.9.25일까지 이루어지며,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
- 전자우편 : skmagic21@korea.kr - 팩스 : 02-2100-2693

※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참고 1 -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유예 심사기준

◆ 유예신청 회사가 다음 요건(①~④)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심사

- ① '23년 중 중대한 종속회사*의 취득 또는 해외 종속회사를 포함한 전사적 ERP 구축 또는 중대한 변경으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변화를 초래하여 설계 및 구축이 변경중이거나 안정적 운영 확인 등을 위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경우

* 신청회사의 개별(별도)재무제표상 자산총액 30% 또는 매출액 30% 이상

** 상당한 기간은 원칙적으로는 6개월 이상

- ② 유예신청회사가 금융회사(외감법 § 9①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별도 기준으로 '22년말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 10조원 미만이며, 신청회사 및 종속회사의 개별(별도)재무제표 합계에서 종속회사의 자산 또는 매출액 비중이 중요*하지 않는 경우로서,

* 신청회사 및 보유한 종속회사들의 개별(별도)재무제표상 자산총액 합계 또는 매출액 합계의 20% 내외 수준

다음 요건 ① 또는 ②를 충족하는 경우

- ① 연결내부회계 시스템 도입을 완료한 후 예비평가에서 식별된 미비점 중 중요사항*으로서 개선계획(Action Plan)이 도출되었으나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상당히 필요한 경우

* 중요 미비점 예시

- 정보기술일반통제(ITGC)의 접근보안/데이터 변경/프로그램 변경 등 미비
- 연결 그룹 수준의 회계정책 및 관련 전사통제 설계 미흡 또는 부재
- 일부 통제의 설계가 누락되고 재무제표 감사 범위에 해당하는 통제를 관련 통제로 식별하지 않은 사례가 유의하게 있는 경우

- ② 연결내부회계 시스템 도입을 완료했고 예비평가에서 해외 종속회사에서 식별된 미비점을 치유하였으나 제대로 운영되는지 확인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경우

- ③ 자산 2조원을 약간 상회하는 기업으로서 차기년도에 자산 2조원 미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거나, 최근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연결 준비가 부족하여 유예기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판단사항 예

- 최근 5년간 자산규모 추세와 매출액 및 영업이익 등의 수익성 추세
- '23년도 사업 상황, 거래 등으로 자산이 유의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최근 1~2년내 급속한 성장으로 자산 2조원을 최초로 초과하였고 해외 자회사의 자산, 매출 비중(30% 이상)이 높으나 해외 인프라가 크게 부족한 경우

- ④ 이와 준하는 사유 등으로 현실적으로 연결내부회계 구축 및 운영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현실적으로 구축 및 운영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

- 연결재무제표상 주요한 종속회사들이 전쟁, 천재지변 등의 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운영이 어려운 경우

참고 2 -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유예 신청서식

○ ○ ○ 주 식 회 사	
우편번호 및 주소:	/ 전 화 : / 팩 스 : /부서명, 직위 및 담당자명: 02-000-0000 02-000-0000
문서번호	
발신일자 20 . . .	
수 신 금융감독원장	
참 조	
제 목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유예 신청	
<p>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p> <p>2. 당사는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과정에 일부 어려움이 있어 불임과 같이 도입 유예를 신청합니다.</p> <p>불 임 : 1)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유예 신청서(양식 준수)</p> <p>2)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유예 신청에 대한 의견서(양식 준수)</p> <p>3) 증빙서류(유예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일체의 자료)</p> <p style="padding-left: 40px;">* 관련 보도자료 등 참고</p> <p>※ 동 공문(별도 양식 사용 가능) 및 불임을 하나의 파일로 제출</p>	
○ ○ 주 식 회 사	
대표이사 ○ ○ ○ (직인날인)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유예 신청서

금융위원장 귀하

다음과 같이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6호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회계정보를 작성·공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말함)의 도입 유예를 신청합니다.

우리는 당사의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책임자로서 이 신청서의 기재내용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검토한 결과, 중요한 기재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의 누락이나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회사명

대 표 이 사 (서명)

내부회계관리제도 책임자 (서명)

1. 기본 정보

(1) 회사

회사명		결산월	
본점 소재지			
구분	<input type="checkbox"/> 유가증권시장 <input type="checkbox"/> 코스닥	DART 고유번호	
		법인번호 (숫자만 기재)	
업종 (표준산업분류 10차)	ex. C29299	금융업 여부	<input type="checkbox"/> 금융업 <input type="checkbox"/> 비금융업
	ex.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구분(백만원)		'18년 사업연도	'19년	'20년	'21년	'22년
별도 재무제표	자산					
	매출					
	영업이익					
연결 재무제표	자산					
	매출					
	영업이익					
'23년 중 중대한 종속회사 취득 (주1)			Y/N	개별(별도)재무제표 자산의 (주2)		(%)
				개별(별도)재무제표 매출의 (주2)		(%)
신청회사의 '22년 연결재무제표상 종속회사 수						
개별(별도)재무제표 자산총액(매출액) 합계에서 보유한 종속회사들이 차지하는 비중				자산총액 합계의 (주3)		(%)
				매출액 합계의 (주3)		(%)
담당자 (전화번호/이메일 /휴대폰번호)		반드시 2인 이상의 연락처를 기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책임자 및 담당자)				

(주1) 취득한 종속회사의 개별(별도)재무제표상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신청회사의 개별(별도)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의 30% 또는 매출액의 30%를 초과하는 종속회사

(주2) 신청회사의 개별(별도)재무제표상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대비 '23년 중 취득한 중대한 종속회사의 개별(별도)재무제표상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비율

(주3)

종속회사의 '22년 개별(별도)FS상 자산총액(매출액) 합계

신청회사의 '22년 개별(별도)FS상 자산총액(매출액) + 종속회사의 '22년 개별(별도)FS상 자산총액(매출액) 합계

(2) 감사인

감사인명		계속감사 여부	<input type="checkbox"/> 계속감사 <input type="checkbox"/> 초도감사
담당이사		전화번호	
회사의 유예 신청에 대한 감사인 동의 여부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위 동의 여부 판단의 근거 기술 (필요시 증빙 첨부)			



2. 도입 유예 신청 사유

(해당되는 사유를 모두 선택)

- ☐ 가. '23년 중 중대한 종속회사를 취득 또는 해외 종속회사를 포함한 전사적 ERP 구축 등으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 또는 운영을 위한 유예 기간이 필요한 경우
- ☐ 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구축은 완료되었으나, 예비평가에서 발견한 종속회사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기간이 필요한 경우 (주1)
- ☐ 다.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구축은 완료되었고 예비평가에서 발견한 종속회사의 미비점이 보완되었으나 운영상 충분한 기간이 필요한 경우 (주1)
- ☐ 라.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대상에 편입되었으나 차기년도에 자산 2조원 미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거나 최근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연결 준비가 부족하여 유예기간이 필요한 경우
- ☐ 마. 기타 상기에 준하는 사유

(주1) 신청회사가 비금융업이며 개별(별도)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10조원 미만인 경우

3. 해당 종속회사 정보

(1)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종속회사 목록

('2. 도입 유예 신청 사유'가 발생한 종속회사를 모두 기재. 단, 중요성 판단에 영향이 없는 종속회사는 제외 가능)

종속회사명	지분율	업종	소재국	신청 사유	자산 총액	%	매출액	%	종업원수	공시 종속회사 여부
				(주1)	(주2)	(주3)	(주2)	(주3)		(주4)
합계										

(주1) 2.에서 해당되는 사유를 모두 기재

(주2) 최근 사업연도(말) 종속회사의 개별(별도)재무제표상 자산총액 및 매출액 (단위 : 백만원)

(주3) 최근 사업연도(말) 신청회사의 개별(별도)재무제표상 자산총액 및 매출액에서 종속회사의 개별(별도)재무제표상 자산총액 및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주4) 사업보고서 공시 대상 종속회사 여부 (여 / 부 중 하나로 기재)

4. 신청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가. 23년 중 중대한 종속회사를 취득 또는 해외 종속회사를 포함한 전사적 ERP 구축 등으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 또는 운영을 위한 유예 기간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이유를 해당 종속회사별로 작성하며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① 유예가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 ② 해당 종속회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이행사항 및 완료계획(시점 명시) ③ 회사의 설명을 뒷받침하는 증빙 자료 첨부
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구축은 완료되었으나, 예비평가에서 발견한 종속회사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기간이 필요 (주1)
(구체적인 이유를 해당 종속회사별로 작성하며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① 유예가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 ② 해당 종속회사에 대한 식별된 미비점 ③ 현재까지 조치 내역 및 향후 조치 계획(완료 시점 명시) ④ 조치에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사유 ⑤ 시스템 개선이 현재까지 미완료된 사유 ⑥ 회사의 설명을 뒷받침하는 증빙 자료 첨부
다.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구축은 완료되었고 예비평가에서 발견한 종속회사의 미비점이 보완되었으나 운영상 충분한 기간이 필요 (주1)
(구체적인 이유를 해당 종속회사별로 작성하며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① 유예가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 ② 해당 종속회사에 대한 식별된 미비점 ③ 현재까지 조치 내역 및 향후 조치 계획(완료 시점 명시) ④ 회사의 설명을 뒷받침하는 증빙 자료 첨부
라.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대상에 편입되었으나 차기년도에 자산 2조원 미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거나 최근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연결 준비가 부족하여 유예기간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이유를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① 유예가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 ② 차기년도에 자산 2조원 미만으로 분류될 수 있는 근거 ③ 향후 자산 등 처분 계획 시 그 일정과 사유 ④ 회사의 설명을 뒷받침하는 증빙 자료 첨부
마. 기타 사유
(구체적인 이유를 해당 종속회사별로 작성하며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① 유예가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 ② 해당 종속회사에 대한 식별된 미비점 ③ 현재까지 조치 내역 및 향후 조치 계획(완료 시점 명시) ④ 회사의 설명을 뒷받침하는 증빙 자료 첨부

(주1) 신청회사가 비금융업이며 개별(별도)재무제표기준 자산총액 10조원미만인 경우



참고 3 -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유예 신청에 대한 감사인 의견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유예 신청에 대한 의견서>				
회사명			감사계약 기간	20 . . . ~ 20 . . .
감사인	감사인명		신청에 대한 의견	동의 / 미동의
	담당이사		전화번호	
과거 신청회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설계·구축·운영 용역 등 비감사업무 수행 여부			Y / N	
유예가 필요한 사유	- 동의 여부 판단의 근거를 상세히 기술 - ① 신청회사의 성격(종속회사, 관계회사 등) ② 신청회사가 도입 유예가 필요한 구체적 사유 등 명시			
비 고	-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기본적 증빙 포함			

위와 같이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유예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제출인 대표이사 (인 또는 서명)

금융위원회 위원장(금융감독원장) 귀 하

참고 4 -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유예 신청방법

가. 금융감독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내 신청방법

- ① (접속) 금융감독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eacrs.fss.or.kr)에 로그인*
 * DART 접수시스템(filer.fss.or.kr)에서 발급받은 고유번호 및 공인인증서를 이용
- ② (서식) '공문 및 첨부서류 샘플 다운로드' 화면에서 관련 자료 다운로드
- ③ (제출) '감사인 지정(재지정) 신청'에서 '신청사유를 기타'로 선택한 후 관련 서류를 제출

참고 5 -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유예 신청 관련 주요 Q&A

1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이 유예되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 유예승인 기업은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이 2년간(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4년 말까지) 유예되며, 동 기간에는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도입 유예 관련 내용을 사업보고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별도)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2

유예승인 기업의 경우 도입 유예 관련 내용을 사업보고서 등에 어떻게 공시해야 하나요?

- 유예승인 기업은 유예사실 및 유예사유에 대한 진행경과 등을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 「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① ('23년 사업보고서) 증선위로부터 연결내부회계 도입이 유예된 사실과 유예사유 및 유예사유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을 기재
- ② (이후 분반기보고서 등) 유예사유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결과를 기재

'23년 사업보고서 공시 (예시)

- 회사는 ○년○월○일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결과 연결내부회계 감사를 2025년 사업연도부터 도입할 수 있도록 2년간 유예받았습니다.

유예가 필요한 미비점
미비점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

후속 분반기보고서 (예시)

- 회사는 ○년○월○일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결과 연결내부회계 감사를 2025년 사업연도부터 도입할 수 있도록 2년간 유예받았습니다.

유예가 필요한 미비점
2. 미비점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
3. 이행사항
4. 미이행사항 및 사유

- 감사인은 연결내부회계 감사 유예 사실을 감사보고서 내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또는 검토의견'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별도) (예시)**

- 독립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는 주식회사 ○○○의 2023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사한 결과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첨부하는 것입니다.
- 참고로, 회사는 ○년○월○일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결과 연결내부회계 감사를 2025 사업연도부터 도입할 수 있도록 2년간 유예받았습니다.

첨부: 1. 독립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
2.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3**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유예 신청을 위해 감사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 도입 유예 신청 시 감사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을 회피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감사인 동의 여부가 기재된 감사인 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유예 심사 시 동 내용을 고려할 예정입니다.

4**심사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 도입 유예 여부는 증선위 의결로 최종 결정(잠정 11월)됩니다.
 - 증선위 의결 직후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유예승인 기업에 대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8.18.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2023. 8

지난해 8.18.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데 이어 오는 8.18.(금)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소정의 기준에 따른 20인 이상 또는 10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 ①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50억원 미만 공사현장)

②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이면서 7개 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

▲전화상담원, 돌봄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고용노동부는 이번 적용 확대가 제재규정 등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하여 충분한 유예기간*(2년)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안**을 통해 현장 안착을 지원한 만큼 적용대상 기업의 상당수***는 법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 ('21.8월) 휴게시설 의무화 근거 마련(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신설, 공포일 1년후 시행)

→ ('22.8월) 50인 이상 우선 적용 → ('23.8월~) 50인 미만 적용 확대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휴게시설 설치 재정지원('23년 214억원), ▲설치 의무 사업장 지도점검, ▲설치 실태조사 및 컨설팅 ▲제도시행 안내 및 홍보 등 지원

*** (미설치 사업장) 적용대상 사업장(159천개)의 8.4%로 13천개소 추정('22년 안전공단 실태조사)

다만, 어려운 경영사정 등으로 아직 휴게시설을 미설치한 기업들을 고려하여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제재(과태료 부과)보다는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제도 수용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기관 협의과정 등에서 제기된 개선필요 사항 등에 대해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방침이다.

* 설치비용 지원(경기도, 경북교육청 등), 노후아파트 휴게시설 용적률 제외 인정(서울, 부산 등)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휴게시설은 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시설임"을 강조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가 조기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1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적용 확대 현장 안착 주요 내용

- (홍보)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확대 안내문(OPS) 제작·배포, 라디오, 전광판 등 매체·플랫폼 홍보, 지자체, 직능단체 등 활용
 - 우수사례 발굴·전파 및 지역별 캠페인 전개
 - * (네트워크 활용) 243개 지자체(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및 지역단위 직능단체 및 협회), 13개 직능단체 및 업종별협회(소속 회원사), 1,378개 안전보건전문기관(안전보건대행 사업장) 등
 - * (플랫폼 활용) 중대재해 사이렌(3.5만명), 한고원 고용허가제 시스템(5만여명), 안전공단 카카오톡 구독자(3.5만명), 지역별 안전보건협의체 등 SNS(6천명) 등
- (특별지도기간 운영) 12월 말까지 특별지도기간(계도기간)을 운영하여, 제재(과태료 부과)보다 시정 중심의 지도를 통해 자발적 휴게시설 설치 유도
 - * 50인 이상 휴게시설 의무화 시행('22.8.18)에도 특별지도기간 운영(~'22.10.31)
 - 중점 지도 대상 : 콜센터, 요양병원, 사회복지시설, 공동주택 및 건설현장 등 취약분야(4,000여개소)
- (컨설팅) 감정노동 취약 사업장, 청소·경비 등 7대 취약직종 등을 대상으로 휴게시설 실태조사 및 컨설팅 제공(2,500개소)
- (재정지원) 경영여건이 열악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비용 재정 지원('23년 223억원)
 - * 1,145개소(개별 950, 공동 195), 214억원 지원('23.6월 기준)
- (제도 운영 합리화) 그간 제도 도입·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현장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제도 운영 합리화 노력 지속 전개
 - * 휴게시설 설치 비용 지원(경기도, 부산, 광명, 경북교육청 등), 조례로 노후아파트 휴게시설 용적을 제외 인정(서울, 부산 등)